'날 풀리니 야밤 질주'…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 사고 빈발

도로 주행 규칙 어기고 인도 달리다 사고
야밤 자전거 운전자·보행자 치고 달아나

날이 따뜻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자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B(19)군을 치고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신가동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 C씨도 자전거를 탄 D(12)군을 치고 달아났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B·D군은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등학생 D(16)군은 보행자 E(55)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거나 차도 오른쪽 갓길로 다녀야 한다. 인도로 통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과 승차 인원 1명 규칙도 지켜야 한다.

전문가는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하고, 어두운 야간 시간대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기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이동장치의 발전은 빠른 반면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나 관련 시설물이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 대신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을 켜거나 감속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4월 30일까지 접수
5억원 이하 생활형 사업·청년정책 제안

광주시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대상 사업은 광주시 소관 사무인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등 두 가지이다. 시정참여형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저출생 등 청년정책 사업으로 예산 제한 없이 제안을 받는다.

다만 민원성 및 특정단체 사업 중복성 사업, 일회성 공연 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한다.

참여는 광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광주시 주민e참여시스템'과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검토 후 시민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예산은 행정 중심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전국 도로 점검

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단속 실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진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9일부터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과 ▲9월부터 11월까지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사고 수습 중이던 2명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들을 잇따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하다, 앞서 난 접촉 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 2대 주변에 서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5.2㎞ 빠르게 달리다 이러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저녁 7시께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다. 숨진 피해자들은 1차 사고 발생 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도로에 서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인식할 수 없었다. 운전자는 야간에 차량 하향등일 때 피해자들을 약 22~29m 거리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아니고 제한속도대로 달리더라도 38.8~49m의 정지거리가 요구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고 어두웠지만 전방 차량의 후미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A씨의 운전 차량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점, 피해자 중 1명이 흰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정차 차량의 후미등·정지등이 켜진 상태였던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술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회피를 위한 제동 내지 운전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해 있음을 인식, 사고를 피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5.2㎞나 초과, 운전해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한 점, 운전 거리가 약 9㎞ 이상 상당한 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피해자 측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현근 기자

광주교육청, 교실 속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광주교육청이 5·18 교육과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초등 4명·중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 교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로운 5·18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OX 퀴즈·카드 짝맞추기·활동지 등을 활용,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5·18의 의미를 잘알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생과 초등 고학년생을 위한 자료를 각각 분리·제작했다.

중학생 대상 자료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소개하며 5·18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대상 자료는 5·18 당시 유신헌법과 현재의 헌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5·18 역사왜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자료를 이달 중 담당 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제45주년 5·18민중항쟁 민주평화대행진, 5·18 청소년 문화제 등 학생·학부모·직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18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 계기교육 자료와 현장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5·18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